

사회서비스

다시, 지역과 시민의 삶 속 사회적경제 꽃 피우기

새 정부가 주목하는 과제와
사회적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22.7.1.(금) 14:00~16:30

장소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2022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진행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14:15 (15분)	축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서면축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서면축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환영사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14:15~14:30 (15분)	발제	발제1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14:30~14:45 (15분)		발제2 노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서비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14:45~15:00 (15분)		발제3 의료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 효과 및 정책 지원 필요성 장지훈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케어본부 부장
15:00~15:15 (15분)		발제4 주거문제 해결 관련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성과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15:15~15:25 (10분)		휴식
15:25~16:30 (65분)	토론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좌 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토론1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2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3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 토론4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전체토론 발제자, 토론자, 청중

축 사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방향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주관기관과 후원해주신 행복나래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는 공존의 삶이자 지역에서는 생존의 삶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인구위기에 처한 경상북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약자를 돌보는 사회적경제는 경제와 사회문화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희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민간중심의 정책 추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한 토탈 마케팅,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 등 ‘경북형 사회적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전 산업에 걸친 불경기 속에서도 경북의 사회적기업은 청·장년의 귀촌과 창업 등에 견실한 성장을 기여하면서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 지방대학 양성, 완전한 자치권 제도화를 통해 기업 성장의 기회, 배우고 일할

기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 등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가 ‘다시, 지역과 시민의 삶 속에 사회적경제 꽃 피우기’입니다. 경상북도는 포럼에서 논의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시대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현대적인 민간협동조합을 설립한 사회적경제의 선구자 ‘목촌 전준한’ 선생의 정신이 깃든 지역입니다.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2018년부터 전국 사회적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전준한 사회적경제 대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8일부터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3일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은 지속가능해지고 국민의 삶은 보다 살기 좋아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벌써, 제18회를 맞이하는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그동안 코로나19와 사회적경제 등 사회·경제·환경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대응과, 그와 관련된 정책의 역할을 무게 있게 다루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제18회 정책포럼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확장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다룬다고 하니,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역시 취약 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가족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주와 수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회서비스가 의식주와 같은 삶의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시민의 필요를 중심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역할을 국가가 모두 맡는 것은 불가능거니와,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OECD, 유럽위원회, UN 등에서도 사회서비스 공급과 필요의 충족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개발의 주체와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경제에서 그간 추진해온 중요한 사례들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정책포럼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성과와 가치를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내외빈과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전국의 사회적경제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대유행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속에 덮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불충분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회통합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흔들림 없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상호자조와 연대, 민주적 운영을 핵심가치로 하여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돌봄, 의료,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윤 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영리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시장경제를 사회적경제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EC(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30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OECD, ILO, UN 등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구체적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진행해왔고, 정부의 지원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언제부터인지 정치적 이슈로 접근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법과 정책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이 나뉘고 있어 아쉬움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흐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통과된 가사노동자법, 탄소중립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지 가사노동자법에는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법 시행에 맞춰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상호자조성 등 핵심가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법도 발의했지만, 여전히 입법공청회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사회적경제의 담론을 만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견인해온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포럼이 포럼 주제와 같이 지역과 시민의 삶 속에서 늘 사회적경제가 꽃 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 and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에 비해 저평가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제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 또한 사회적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5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촉진 방안을 토론해 왔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제도는 제거하는 것이 맞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합당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영역 확대를 예상해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및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분석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정책 방향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이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의의는 ‘사회에 복무하는 경제’로의 전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경제의 의의를 기본소득과의 연관에서 강조하곤 했습니다. 저에게 기본소득이 구현된 세계의 경제적 형태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회적경제라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회적 경제인분들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장경제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의입니다. 이제는 상식에 가까운 진리이지만 그 개시부터 현재까지, 근대문명이 사회와 경제의 분리라는 대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음미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의 분리의 실질적 의미는 사회를 철저히 시장경제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범용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인공지능 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소득의 원천은 여전히 시장임금의 굴레에 갇혀 있어야 하고 일자리는 끝없는 유연화의 압박에 놓여야 합니다. 완전고용의 짧은 시기가 끝난 한편에 쓸만한 일자리를 찾아 배회하는 집단이 있고 반대편에는 장시간 과로에 신음하는 집단이 상존합니다.

토지와 자연이라는 원천적 공유부가 시장경제에 오롯이 던져진 결과는 극한에 이른 사회의 위기, 더 나아가 인류 절멸의 기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화와 재정 제도는 어떻습니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기에 통화와 재정은 ‘중립성’이라는 시장경제의 요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상상력은 기준금리 인상,

건전재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중립성’논리와는 전혀 다르게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 전담으로 귀결합니다.

오늘날 시장경제 논리의 압제가 일으키는 효과를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유화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회화’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시대의 굵직한 문제들에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부자 감세, 금리인상, 규제완화, 균형재정 등이 일으킬 효과 역시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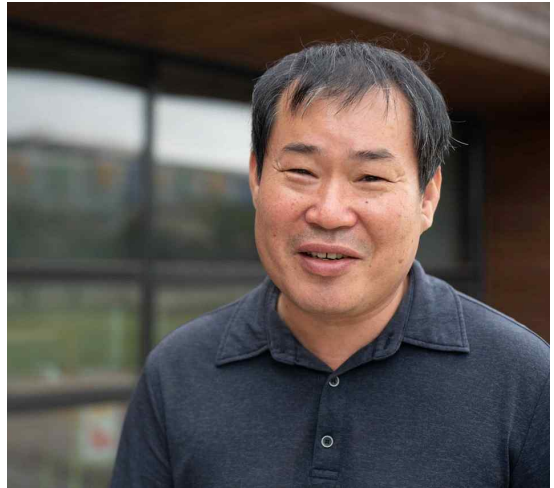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저의 언술이 시장경제의 전면적 부정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철저히 종속시켜온 그 파국적 결과를 목도하는 현재, 사회적경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요구에 복무하는 경제,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에 복무하는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인식은 저에게 확고합니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에서 바로 그‘사회적’이라는 말의 실체적 의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소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환이 언제나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대안과 가능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잘 이해합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의 깃발이 오른 이후 제도적 정책적 현재를 평가 정리하고, 시민사회에 이미 자생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사례들의 성과와 가능성, 개선점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소중한 기획을 꾸준하게 끌고 온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에 함께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의 주역들에게도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앞으로도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2018년, 「1차 사회적경제정책포럼」이 개최된 지 벌써 5년이 흘렀고, 오늘, 열여덟번째 사회적경제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공동주관해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후원해주신 행복나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축사로 함께 해 주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담았습니다. 지역소멸/불평등/기후위기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시, 지역과 시민의 삶 속 사회적경제 꽃 피우기>란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사회서비스의 역할과 범위를 사례를 통해 짚어보는 자리란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8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3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인이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과 참석해 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 인사드립니다.

환영사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사회적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현곤입니다.

어느덧 18회를 맞이한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지난 6년간 현장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의 의견을 두루 나누며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장 가능성을 조명하고,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문제해결, 차별화된 가치 창출로 왜 사회적경제인지, 왜 사회적경제여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의 이러한 성장을 국민들께서 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정책 과제들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경제 정책도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야 할 때라는 공감대 위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역할도 컸습니다. 정부의 정책

적 뒷받침과 사회적경제 현장의 부단한 노력이 모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씨앗을 뿌려왔는지 다시 한 번 훑아보고, 흩어져 있던 각각의 노력들을 한 데 모아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사회적경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 주었는지,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회적경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고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가 특정 문제의 해결 차원을 넘어 삶의 질과 공동체를 고민한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능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현장과 정책이 나아가는 길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문제해결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저 또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1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발표자료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22년 사회적경제 정체성 선언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강 민 수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정체성 (正體性, identity)

존재의 변하지 않는 본질

왜? 정체성을 고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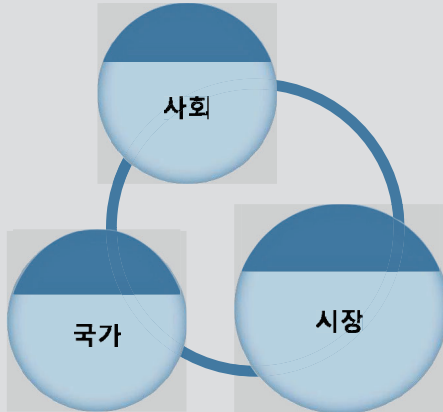
무언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과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

그럼 왜? 우리인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믿지 않는 개인들끼리는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작동하며,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활동”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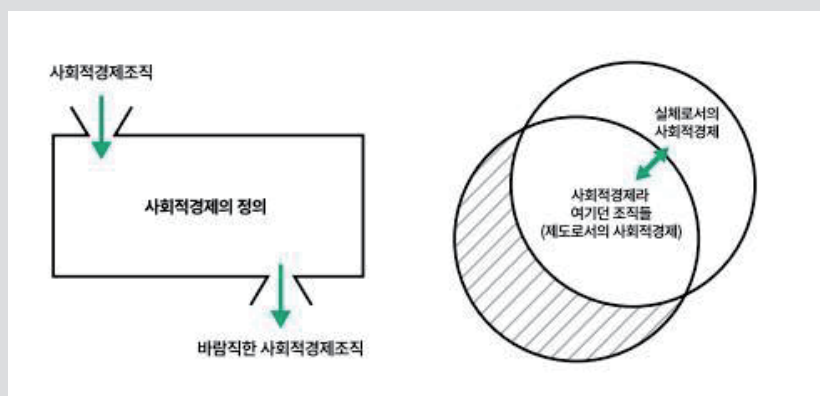
고유성 : 1) 살림살이 2) 호혜 3) 인간존중 4) 민주주의 5) 혼종성(국가-시장-시민사회의 작동방식 섞이고, 내부 경합 -> 시장경제의 전형에 가까운 모습 또는 국가의 통치 도구도 될 수 있음)

역사성 1) 삶의 위기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동료와 함께 해결하는 집합적 실천 2) 민중의 자조 경험 확대 3) 시민권의 확장

3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의 범위



제도로서의 사회적경제와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가 있을 수 있고,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가 본질이다.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현재적, 잠정적이다.

범위로서의 사회적경제는 제도로 합의되고 이해되지만 동시에 변화하면서 재구성된다.

4

사회적경제의 역사

사회적경제 운동이 있었다.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 역사로 접근

근현대시기 각 시기의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응한 사회적경제운동이 꾸준히 있었다.

- 1) 일제강점기 : 식민지 근대 체제를 벗어나 해방된 민주적 평등한 사회경제체제 지향
- 2) 해방 후 개발 독재기 : 분단, 국가주도경제체제에 대응한 민중생존권, 생활개선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이 통합
- 3) 시장경제기 : 급속한 산업화, 양극화, 생명 공동체 돌봄의 위기에 대응한 대안담론, 대안 모델 만들기
- 4) 외환위기 이후 :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파트너의 위치, 제도화를 통한 영역 확장, 혁신자로서의 정체성 위기

5

사회적경제의 역사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성취(성과)

가장 근본적이고 삶에 밀착한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사회적경제라는 통합적인 이름을 가졌다.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이야기 정도로 다각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와 시장과 경합하는 사회적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연대조직화를 통해 국가 시장-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다.

생산과 소비, 서비스, 재분배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방안들을 구조화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성원권을 확대해갔다.

협동적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6

사회적경제의 현재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성장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713	1,877	2,122	2,435	2,777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10,640	12,540	14,550	16,869	19,429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1,377	1,442	1,514	1,556	1,652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1,186	1,092	1,211	1,176	1,062
합계		14,916	16,951 (13.6%↑)	19,397 (14.4%↑)	22,036 (13.6%↑)	24,920 (13.8%↑)

출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2021년 5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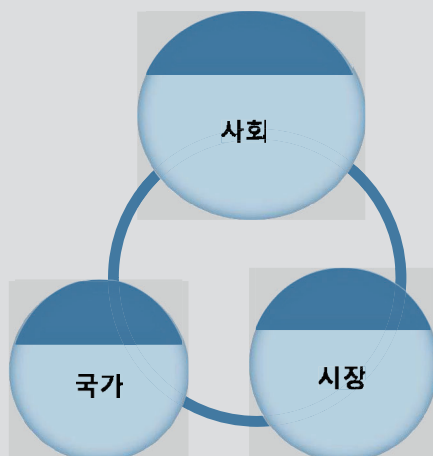
(현재) 2021년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소속된 회원과 회원에 소속된 법인·단체의 규모는 약 3,200여 개(여기에는 생협, 신협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이며,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15만 명으로 추정

(성장) 다만, 한국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무엇으로 인식하거나 인식되고 있음

7

사회적경제의 과제

한국 사회적경제의 미션과 역할



(미션)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배태된 경제의 기능(본래 시장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시적 혁신자가 되어야 함

(역할) 거시적 혁신자로서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가 처한 불평등(자산/소득),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며,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하는 '사회적 접착제'가 되어야 함

8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 또는 문제들



17개목표, 169개 세부목표, 234개 지표 이 중 제가 주목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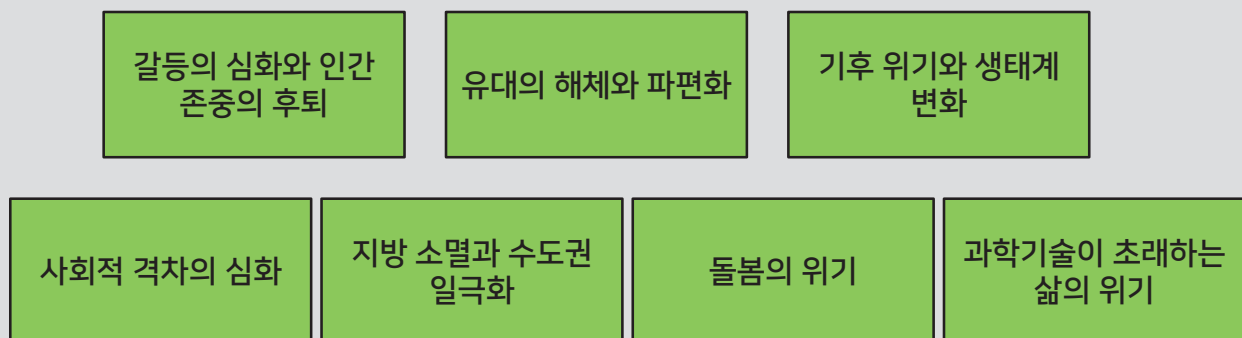
9

우리사회의 사회문제들

사회적경제가 주목하는 사회문제들

사회문제란 많은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이라고 '인식' 하는 사회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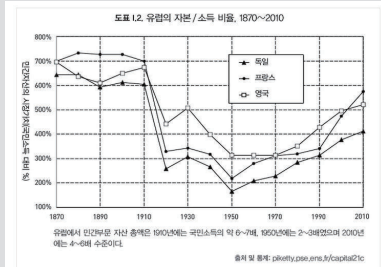
사회문제는 인간들의 집합적 실천을 통해 해결되어왔는데,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집합적 실천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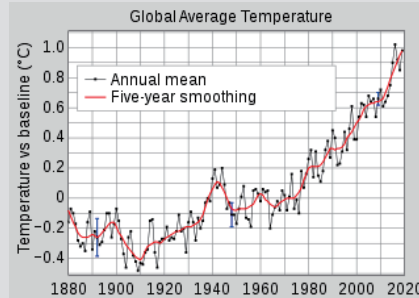
10

특별히 주목하는 우리시대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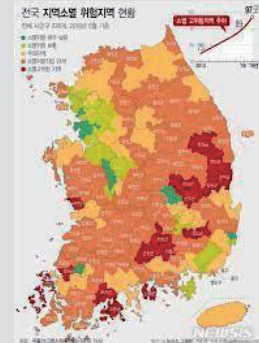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



불평등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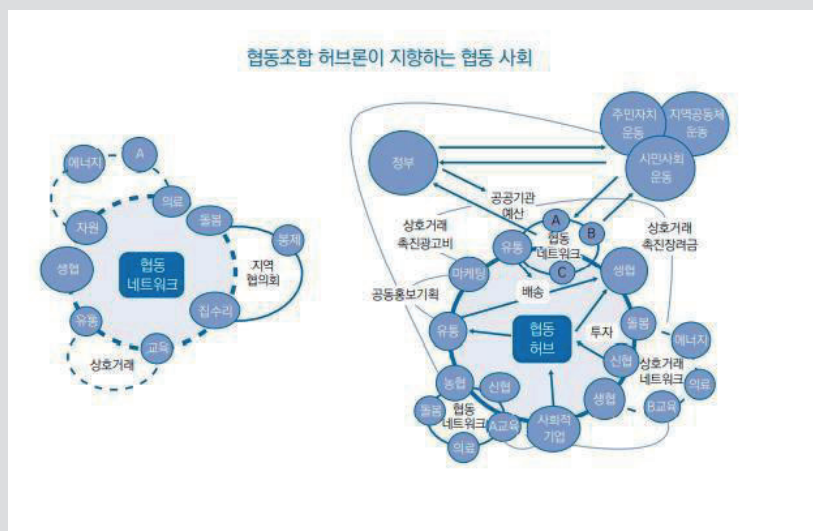
지역소멸

모든 경제시스템은 사회시스템 안에 있고 사회시스템은 생명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을 해치면 안된다. 누구
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

11

사회적경제의 미션과 역할을 통해 만들어갈 사회

관계가 살아있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협동의 지역사회



출처 :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

12

사회적경제 다움을 위한 한국 사회적경제의 실천적 과제들

'한 사람 한사람의 구체적인 사람의 문제'와 결합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

일상을 새롭게 조직하는 활동임을 인식하는 것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및 시장과의 비판적 거리두기를 항상 새겨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이상을 가져야 한다.

연대와 협력의 일상적 조직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교육이 장려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발제2

노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서비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노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서비스; 돌봄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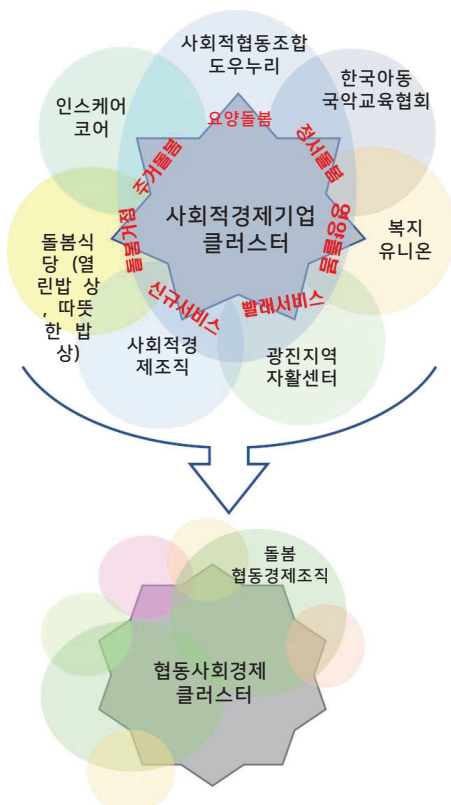
2022.7.1

민 동 세

2022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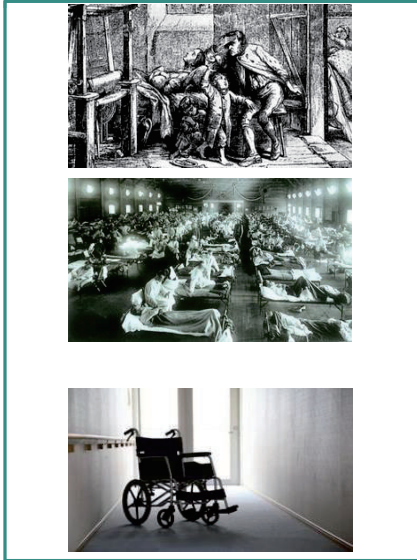


함께 생각하기; 새로운 사회적 위험?

1. 위기의 노인, 불안한 미래
2. 사회서비스 개념변화와 공급확대
3.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변화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쟁점, 보편성과 공공성
5.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사회적경제
6.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과제

함께 생각하기; 새로운 사회적 위험?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보호



<네이버 이미지 검색>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수요의 개별화



2022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서비스

1. 위기의 노인, 불안한 미래

1 불안한 미래사회_고령화

● 급속한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세대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을 시작하여
65세 이상 인구 급격히 증가

“2025년 1천만 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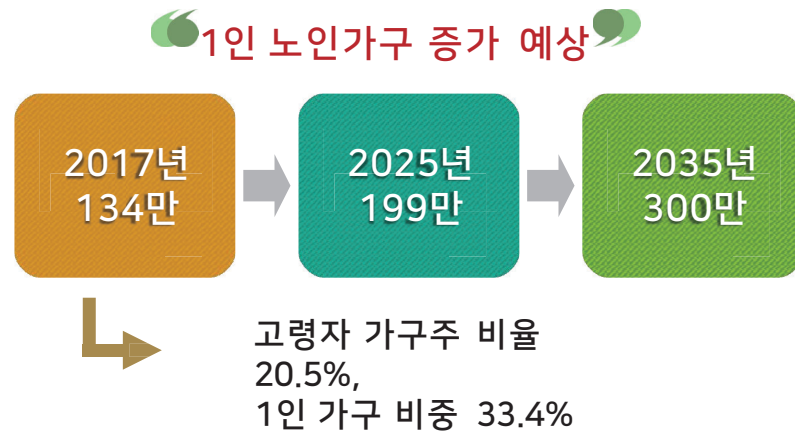
2028년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층 진입완료 시기로 1,210만 명

2039년 전체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의
노년층 진입완료 시기로 1,683만 명으로 추계

1. 위기의 노인, 불안한 미래

2 불안한 미래사회_고령자 가구

●고령자 가구의 급증



1. 위기의 노인, 불안한 미래

3 불안한 미래사회_초고령화

●후기고령인구의 증가

▶노인인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단위 : 만 명, %)

년도	2017	2025	2028	2039
노인인구	708	1,051	1,210	1,683
총인구 대비(%)	14%	20%	23%	32%

(단위 : 만 명, %)

년도	2017	2025	2028	2039
후기고령인구(천명)	153	246	275	483
총인구 대비비율(%)	3.0	4.7	5.2	9.2

1. 위기의 노인, 불안한 미래

4 불안한 미래사회_가난한 노인

●가난한 노년의 삶

- ▶ 더 오래 일하고 준비된 소득은 부족한 상황



▼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내 실질 은퇴연령(72세)이 가장 늦은 국가군에 속함

■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 2016년 30.7%

▼ 교육, 젠더, 계층적 차이가 생애과정에 심화되면서 노년에 축적되어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을 구조화함

1. 위기의 노인, 불안한 미래

5 불안한 미래사회_위기의 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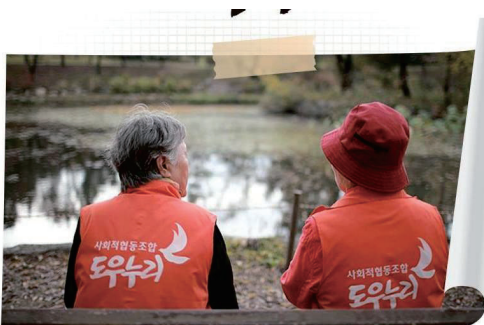
●불안한 노년의 삶

- ▶ 복합적 위험사회에서 노년의 삶

“과거보다 오래 살고 건강하다.”

“할 일이 없고, 사회참여도 못하고, 경제적·관계적으로 가난하고, 불평등하다.”

“존엄한 돌봄을 받기 어렵다.”



2. 사회서비스 개념 변화와 공급 확대

1 사회서비스 개념의 변화; 법적 합의

• ; 사회보장으로 사회서비스를 이해

사회보장기본법(2012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 • 4대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주요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의료급여 -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 • 돌봄, 시설이용, 상담, 재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이용 -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보미 등 돌봄 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

2. 사회서비스 개념 변화와 공급 확대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년)

-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2 사회서비스 공급방식 변화(2005년, 2008년, 2012년)

-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가 간의 구매가 직접 현금으로 지불되지 않고 제3자 즉, 재정공급자가 지급하는 방식(바우처나 사회보험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

3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사업(2006년)

-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근거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중 일부를 포함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대(2008년 전달체계 개편)

-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기존의 사회복지법주에 고용, 교육, 주거, 문화 등을 확충

5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2년)

- 사회서비스 정의 명문화

2. 사회서비스 개념 변화와 공급 확대

2 사회서비스 내용의 확장; 각 부처별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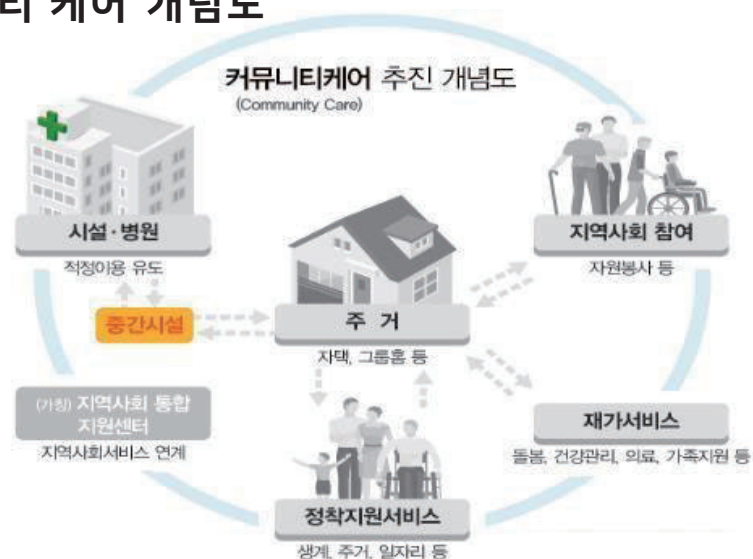
소관부처	주요 사회서비스
복지부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고용부	직업 훈련, 취약계층전담 취업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등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특수교육, 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
농림부	취약농가 영농 가사도우미 지원, 농촌주택 개량지원, 농어촌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국토부	공공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등
문화부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보훈처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기타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환경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청), 에너지바우처(산자부) 등

<출처 : 노대명 외, 사회서비스분야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3.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변화

1 커뮤니티 케어_개념

● 커뮤니티 케어 개념도



<자료 :보건복지부>

3.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변화

2 커뮤니티 케어_기본계획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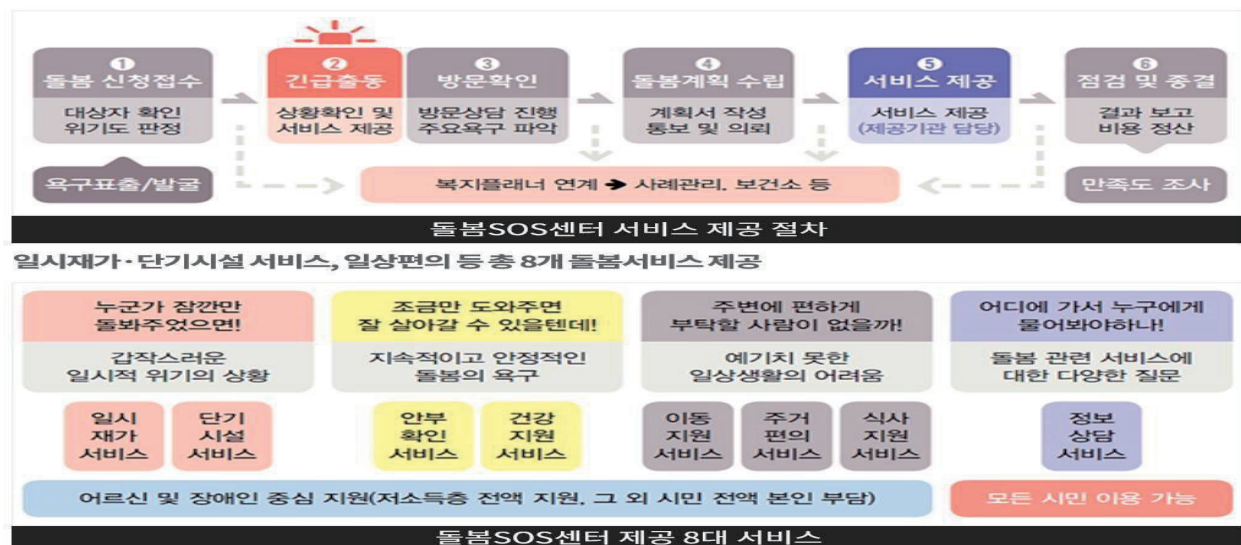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까?**



<출처 : 지역통합돌봄기본계획, 보건복지부>

3.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변화

- 서울시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절차와 서비스 내용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쟁점, 보편성과 공공성

1 사회서비스 정책확대 쟁점_보편성

1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올바른가?

- 사회서비스 공급정책: 구매력이 취약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전략 채택
- 사회 안전망: 빈곤층 및 취약계층 중심의 잔여적 시스템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를 한계로 작용

2 사회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 사회서비스 산업 측면에서 접근: 욕구에 따라 개별 가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 ➔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관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요구됨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쟁점, 보편성과 공공성

1 사회서비스 정책확대 쟁점_보편성

3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가능한가?

중산층 이상의
집단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미비

여성 취업률이
증가

다양한 방식의
아동보육 시스템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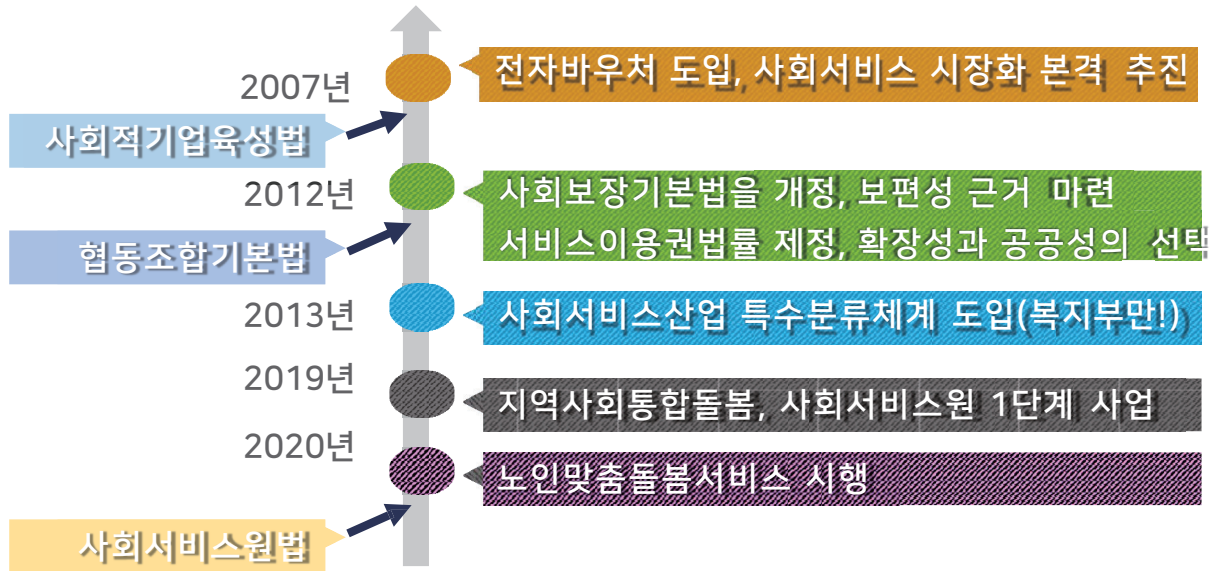
인구고령화

간병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여건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쟁점, 보편성과 공공성

2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쟁점_공공성

1 사회서비스 공급방식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환경 변천사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쟁점, 보편성과 공공성

2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쟁점_공공성

2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품질 하락, 바우처 방식 때문인가?

- 전자바우처를 도입하면서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였음

BUT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열악한 일자리를 양성하고 품질을 저하시켰다는 평가

- 서비스 공급을 계획, 관리하는 정책적 진일보와 욕구기준을 채택

BUT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긍정적 평가

- 공급기관 확대를 위한 '급격한 규제완화'가 공급기관의 영세화와 '저임금-저숙련' 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산으로 이어져 사회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정부의 관리압력 증가로 나타났다(양난주, 2017)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쟁점, 보편성과 공공성

3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쟁점_노동권

1 바우처, 사회보험의 공급방식이 돌봄 종사자 처우를 낮추었나?

- 이용자 변심, 변화에 따라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고용형태는 바우처나 보험 방식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주장

BUT

- 고급기반 자체가 미흡했던 정책환경은 중고령, 비숙련자의 노동 시장진입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돌봄욕구에 부응하는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형태는 자연스러운 등장이었음.

- 낮은 임금과 처우, 노사갈등은 서비스기업의 경영책임으로 전가

BUT

- 서비스 가격이 적절한가? 돌봄노동자의 지위가 존중되는가?
-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처우수준이 적용되는 것은 낮은 수가와 비정상적인 가격정책(기술과 지역 등에 관계없는 동일가격) 때문에 발생하며, 복지부와 고용부의 근로관계법 적용이나 산업분류 등이 협업 되지 않는 것에 기인됨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쟁점, 보편성과 공공성

3 사회서비스 정책확대 쟁점_노동권

2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힘의 크기는 적절한가?

- 공급방식에 따라 권한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에 따라 크게 종속되고 있음
- 돌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숙도, 합리적이고 강력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사회서비스 공급조직의 윤리적 태도

3 돌봄 종사자의 권익보호는 노동조합만 할 수 있는가?

- 사회보장으로 돌봄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보호는 공공성의 출발지점
-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공급조직 등 정부와 제도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에서 돌보노동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권리를 높이고 이로운 처우를 만들 수 있을까?
 - ➔ 외부 조직들에 의해 불만을 부추기고, 일부 노사갈등을 기획하며 중앙조직화 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

5.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사회적경제

1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은 국가만 담보할 수 있는가?

- 사회서비스 전달방식 변화(바우처, 사회보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쟁점으로 부각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점

전통적 제공자인 비영리조직뿐 아니라 영리조직까지 확대된 점

- 공공성의 핵심은 가치와 규범이지 서비스의 속성이나 제공주체가 아니라고 주장 (보즈먼 : Bozeman(2007), 멀튼 : Moulton(2009))

예 일명 메르스 사태 때 모 공공병원의 환자 받지 말라는 이메일 사례

5.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사회적경제

2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사회적 경제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

사회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관점에서
시장은 단순히 서비스 전달수단에서 복지와 경제의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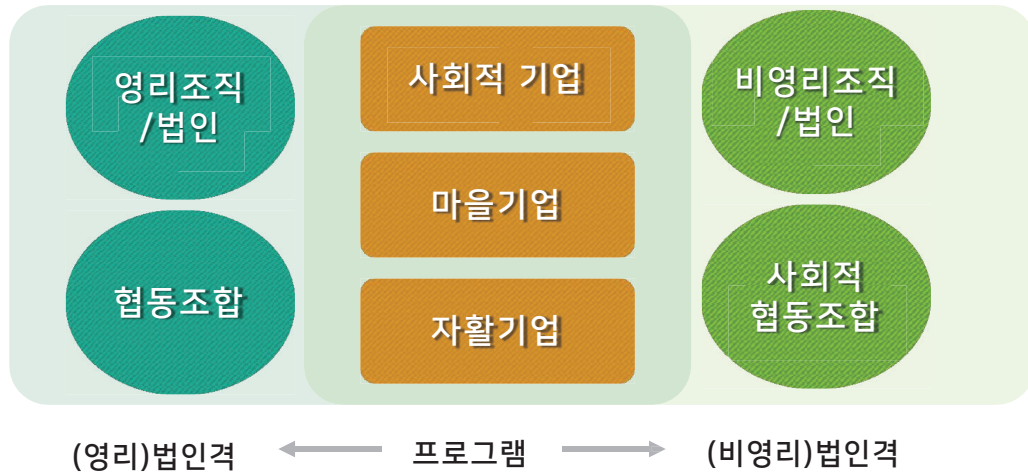


전통적 복지국가가 가졌던 사회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정책접근방법(경제의 재정 이익을 복지정책에 소비)

5.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사회적경제

3 보편적 확대와 공공성 보장, 비영리법인의 경제활동조직으로 대안

법률의 “**법인격**”과 정부정책의 “**인증 프로그램**”으로
협동사회경제조직을 구분하고 있음



5.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사회적경제

—●주식회사 vs (사회적) 협동조합 vs 사단법인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근거 법률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이해	공공이익	공공이익
운영 방식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	신고(영리)	인가(비영리)	인가
책임 범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 결합	인적 결합		인적 결합
사업 예	대기업/중소기업, 삼성전자(주)	일반경제 활동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학교, 병원, 복지단체 등

5.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사회적경제

4 돌봄종사자의 노동권보장, 현장중심의 민주적 운영원리에서 대안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실업, 안전, 가족, 문화 등)을 해결하려는 주체들의
자발적인 인적 결사체이면서 **자조적인 경제활동조직**임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ICA : 국제협동조합연맹(1995)

공통의 필요와 욕구 충족	협동조합	자발적으로 결성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		자율적 조직

5.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7원칙(국제협동조합연맹, 1995년)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7.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6.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과제

1 돌봄사회서비스 공급조직에 대한 새 분류 적용

1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유형분류에 대한 검토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형, 사회서비스제공형 기업의 사회적미션과 다르게 적용. 기업의 정체성을 명시할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 주목적사업으로 돌봄사회서비스사업을 새유형으로 분류하고 조합의 정체성을 명료화 할 필요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병행

-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인가와 인증 절차를 통합(*개선)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새 분류하면서 인가, 인증의 지표항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가 필요

6.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과제

2 사회적 프랜차이징, 사회적경제 공급 규모화

1 사회적경제조직(*연합회 등)의 서비스 프랜차이즈 규모화

- 사회적경제를 브랜드 하는 사회적 프랜차이즈가 전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의 전국 브랜딩으로 제공조직을 규모화 하고, 본사를 통해 서비스 표준화(*매뉴얼화)를 기대

2 사회서비스 사회적프랜차이즈 공급방식에 대한 연구를 선행

- 새로운 창업과 프랜차이즈화가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 제공조직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방식으로 매구 우체적인 모델과 로드맵 제기가 필요
- 기존 서비스에 대한 직무술서, 노무관리,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 매뉴얼 개발과 브랜드 홍보과 가맹확대가 중요
- AI, IT 등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돌봄영역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연결에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

6.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과제

3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환경 개선

1 돌봄사회서비스 공급기업 자본조달, 시설확충 방식 혁신

- 돌봄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임차료 등 운영비와 신규서비스 개발비 등 운영, 사업비 자금조달방안 다양화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확충방안 다각화;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본조달 확대하고, 건축 후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식검토

2 조세감면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특례를 위한 법개정

-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특례를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적용(*산업구조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적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특성상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인력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을 상쇄하도록 개선
- 주목적사업에 대한 취득세, 고용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등 세부적인 조세감면 등을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2022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서비스



잘했고
잘하고있고
잘할거야

"Good job, Good service!"

발제3

의료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 효과 및 정책 지원 필요성

장지훈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케이션본부 부장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 운영 사례



건강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목차

1.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2. 안산의료사회 재택의료
3. 재택의료센터 현황
4. 팀기반 재택의료 필요성 및 발전 방안
5. 재택의료센터 사례 소개

1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 김영림)			
설립일자	2000년 6월 28일 (창립일 4월 22일)			
소재지	커뮤니티케어사업부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 로얄프라자 (2,3,4,5층)		
	일차의료사업부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1, 파크프라자 (5,6층)		
	새안산상록의원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92 (2,3층)		
지정 현황	사회적기업(2008년), 사회적협동조합전환(2013년), 강소기업(2018년~2021년)			
사업소 현황	의료	보건	돌봄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안산의원■ 새안산상록의원■ 새안산한의원■ 새안산우리치과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건강검진센터■ 가정간호사업소■ 방문간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꾸는 집 요양원■ 재가장기요양센터■ 봄누리 데이케어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새안산 밥드림 (위탁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5노인통합돌봄센터■ 경기사회서비스교육원 (평생교육기관)■ 발로뛰어 자원봉사단
직원 현황	452명 (구성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행정직, 조리원)			

2 재택의료센터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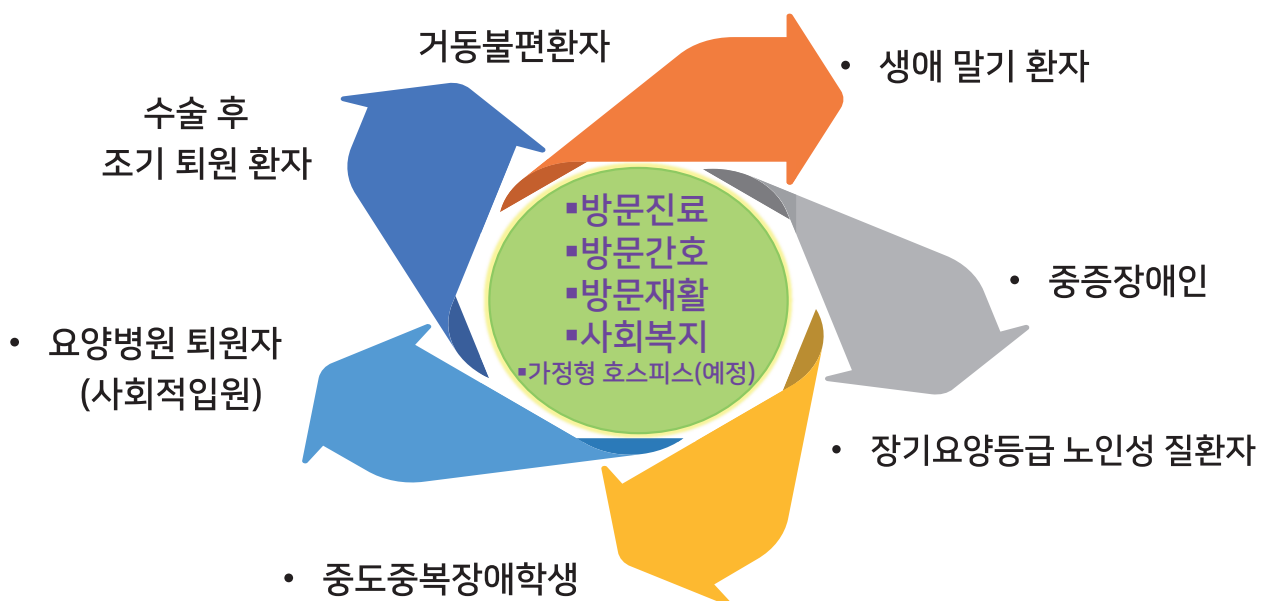
업무	자격	인원
방문진료 전담의 촉탁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1
방문간호, 의료 행정	간호사	2
초기상담, 사례관리, 케어플랜 사회복지상담 및 자원연계, 공공행정	사회복지사	1
방문재활운동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3
가정간호, 방문간호	가정간호사	2

2022년 5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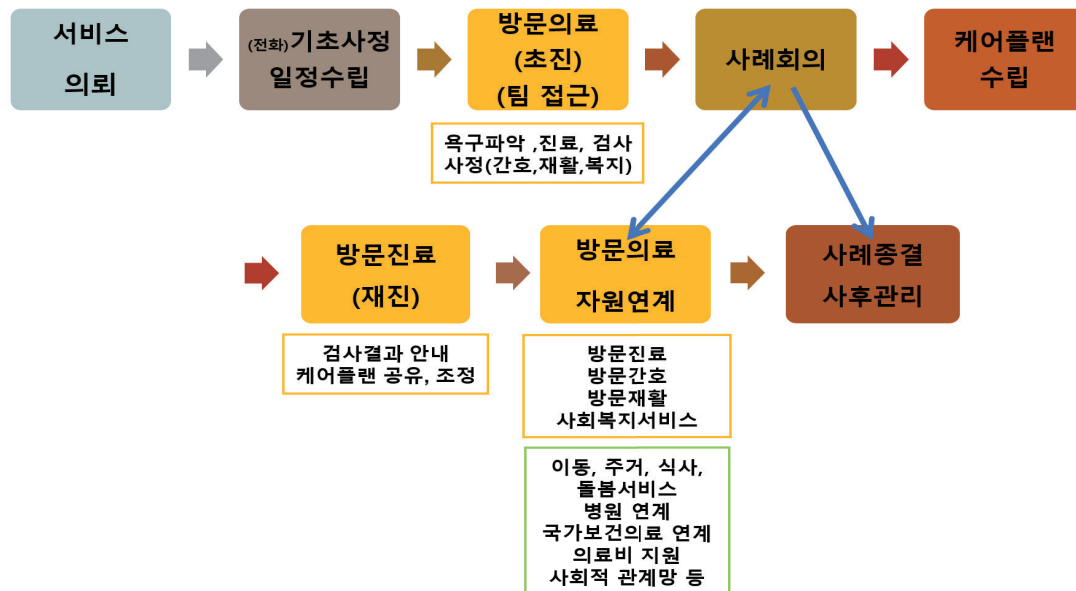
2 재택의료센터 미션



2 재택의료센터 : 대상자 및 수행 사업



2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제공 흐름도



2 재택의료센터 : 관련 제도, 운영 자원



2 2021년 재택의료센터 진료 현황

2021년 안산형 주치의 시범사업 중심 (안산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방문의료사업)

- 총 서비스 대상자 : 74명
성별 : 남 30명 / 여 44명
동거인 : 유 26명 / 무 48명
종결 : 26명 (사망 6명, 전출 3명, 요양병원 2명, 자기관리 15명)
- 방문진료 310건 / 방문간호 664건 / 방문재활 30명 504건

3 팀기반 재택의료 필요성 및 발전 방안

- ✓ 방문의료는 환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환자를 진료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만남.
집에서 환자를 만나면 삶이 보임.
환자의 질환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다양한 욕구와 복잡한 문제를 동반.
질병 치료를 넘어서 건강관리, 생활 개입 필요
- ✓ 재택의료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Aging In Place 실현
- ✓ 다학제적 접근은 필수이며 기본
- ✓ 팀기반 재택의료는 환자 통합돌봄 효과 제고, 신속 해결과 긴밀한 해결 등이 가능

3 팀기반 재택의료 필요성 및 발전 방안

✓ 팀기반 재택의료의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 다학제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문의료 서비스별 법적 근거, 서비스 비용 등)
2. 환자 지원에 대한 재택의료팀의 관점 중요
삶의 주체로서 자기 돌봄 의지가 향상되고,
서로 돌봄,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AIP가 실현되도록,
질환이 있더라도 현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부여하고,
질환의 두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삶을 방치하지 않도록,
휴머니티 케어가 실현되도록 개입

3 팀기반 재택의료 필요성 및 발전 방안

✓ 팀기반 재택의료의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3. 팀기반 재택의료의 환자지원체계 마련
우리 재택의료팀은 환자의 어떠한 변화를 원하는가?
환자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 팀은 무엇을 지원 할 것인가? 어디까지 지원 할 것인가?
필요한 다른 지원체계는 무엇인가?
서비스 개입의 목표, 우선 순위와 지원 내용, 역할 정하기 등 환자 지원 과정
유연한 사례회의의 구조 : 내부, 외부, 긴급, 일반 등
4. 다학제 전문가, 팀기반,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자원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서비스 개입이 잘 작동되는지를
모니터링 중요

3 팀기반 재택의료 필요성 및 발전 방안

✓ 팀기반 재택의료의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5. 다학제 전문가, 재택의료팀의 열린 관점과 열린 의사소통
지역사회 기반 실천 경험과 실천력 네트워크 등

4 외부기관, 자원 연계 방안

❖ 환자 당사자 및 내부 자원의 한계(전문성, 자원 부족 등)로
외부자원,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외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먼저 내부, 외부의 자원 리스트 정리, 관련 기관 찾기
- 외부기관 전문성과 역할 존중하는 상호 신뢰, 협력 체계 구축
(협력 내용, 개입 강도, 기관들의 역할 등)
- 협력기관과 서비스의 중복, 누락, 적절한 서비스 양 등 연계 이후 과정 모니터링.
연계 개입 계획이 함께 공유될수록 효과적
- 일상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체계에 대한 관심, 네트워크 참여

5 사례1: 자기돌봄 의지가 없는 환자의 암 치료 개입

환자 정보	박** (남자 / 만76세 / 독거노인)
방문진료 의뢰 경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기간	2021. 1 ~ 2021. 12
1차 문제 상황, 욕구, 요구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척추협착으로 우측 다리 힘이 빠지고 지탱하지 못하여 거동 어려움. 작년 8월까지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 가능했으며 주로 식사하기 위해서 외출했다고 함. 현 거주지로 이사 후 점점 전신쇠약감이 생겨서 외출 하지 못함. 엉덩이로 이동 가능하고 상체 근력 강함. 이동 변기 앓기 시도하지 않음. 거동 의지와 치료 의지 미약함 한의 방문 진료 중 욕창 발견, 치료가 필요하나 대소변을 이불에 하고, 환부에도 대변이 묻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치료 전 감염 관리를 위한 개입 필요 거동 불편으로 외래 진료가 어려워 방문진료를 통해 욕창 상태를 파악하고, 방문간호를 통해 욕창 치료가 가능한지? 외래진료로 치료 해야 할지?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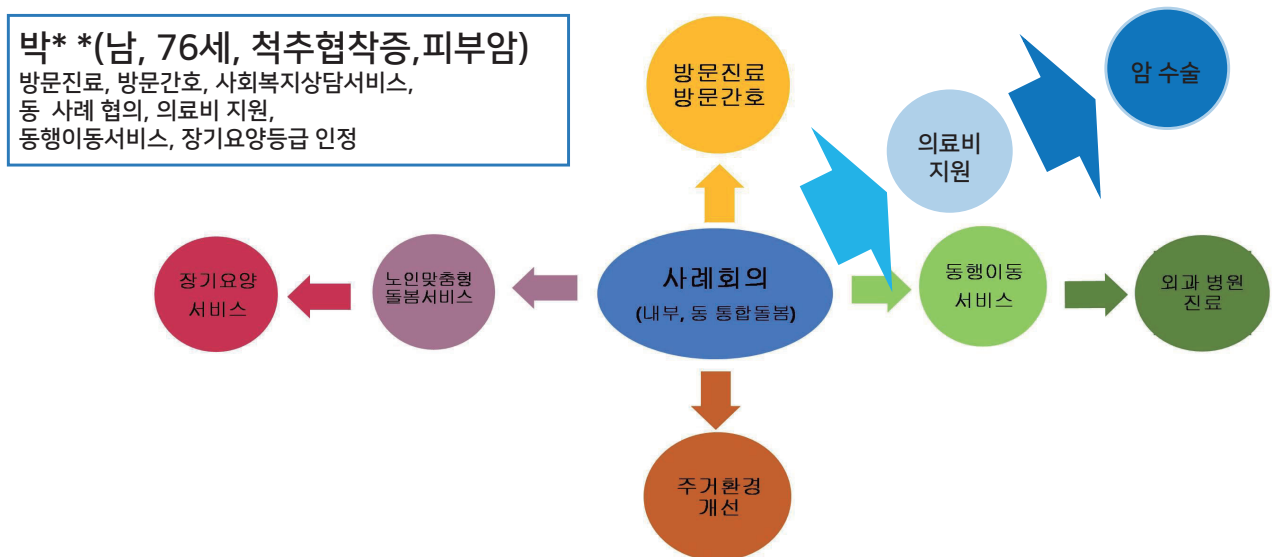
5 사례1: 자기돌봄 의지가 없는 환자의 암 치료 개입

환자 정보	박** (남자 / 만76세 / 1인 가구)
2차 문제 상황, 욕구, 요구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상성 욕창으로 파악됐던 환부의 경과가 좋지 않아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 MRI 검사 등의 정밀 검사 필요, 검사비 c't 마련하지 못함.
3차 문제 상황, 욕구, 요구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암 진단, 치료비 필요, c't 치료비 마련하지 못함. 가족과의 관계 단절, 보호자와 연락되지 않음.

5 사례1: 자기돌봄 의지가 없는 환자의 암 치료 개입

환자 정보	박** (남자 / 만76세 / 1인 가구)
케어플랜 및 서비스 제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재택의료팀 사례회의, 자원 연계를 위한 외부 기관들과의 사례회의 진행 • 감염 관리 및 돌봄 지원: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침대) • 외과적 처치 후 욕창치료를 위한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방문재활 진행 (앉기-의자에 앉기-휠체어에 앉기-전동휠체어로 외출하기-사회 접촉) • 방문의료서비스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진료 : 진찰, 상담, 혈액검사 / 5건 - 방문간호 : 욕창 치료, 외래 진료 동행 / 75건 - 방문재활 : 근수축 감소 및 하체 근력 강화 재활 치료 / 6건 • 외래 진료를 위한 동행이동서비스 연계 • 자기관리와 보존 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필요하면 정신과 상담 고려하고자 함. •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 신청 • 의료비(정밀검사비, 입원치료비) 지원 : 900만원 • 주 사례관리 변경 : (방문진료 의뢰 전) 동 주민센터→(방문의료)재택의료팀→(암치료 퇴원 후) 방문요양센터

5 사례1: 자기돌봄 의지가 없는 환자의 암 치료 개입



5 사례1: 자기돌봄 의지가 없는 환자의 암 치료 개입

c't는 공공기관의 방문진료 의뢰로 만난 환자
정밀검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대, 가족 및 사회적 지원체계 없고, 경제적
자원도 없으며, 자기돌봄 및 치료 의지가 미약한 환자,
현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의 자원 및 개입의 한계가 있는 상황,
방치하면 질환이 악화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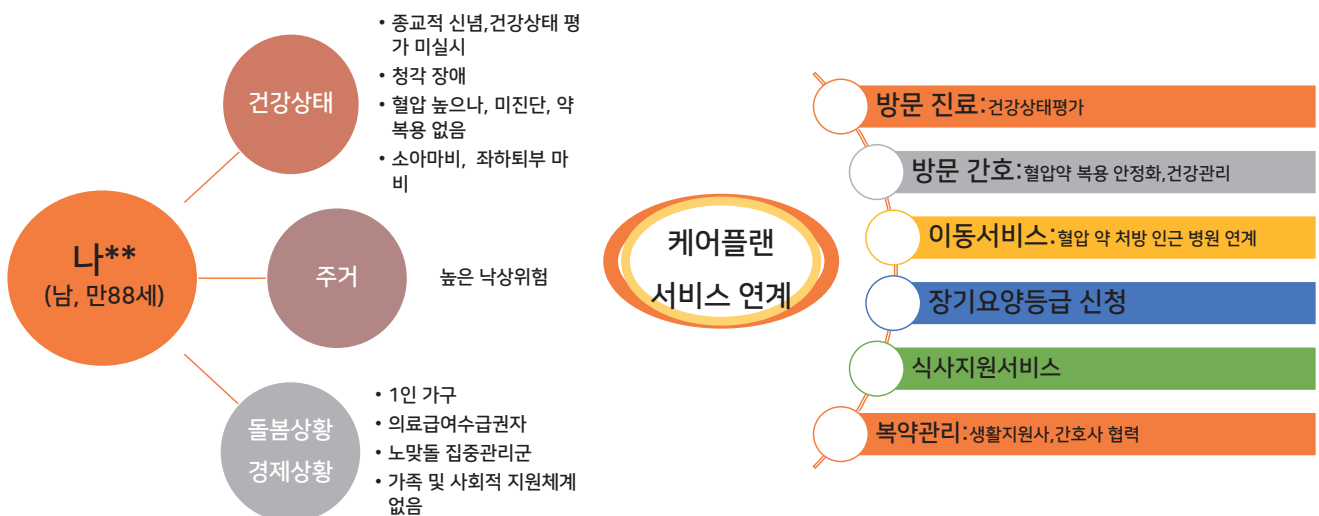
✓다학제 팀 기반 사례회의 진행 : 우리 재택의료팀의 환자 지원의 관점으로 부터

출발해서 개입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방법을 수립

✓복잡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례, 다양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사례일수록 일수록
단계별 목표와 개입계획을 수립하고 (무엇을,어떻게), 관련 기관들과의 역할 정하는 것이
효과적. (어느 기관, 누가 주 사례 관리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환자와 문제와 욕구를 명확히 하고, 개입목표와 계획을
공유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변화의지를 끌어내는 것.

5 사례2 : 청각장애,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 환자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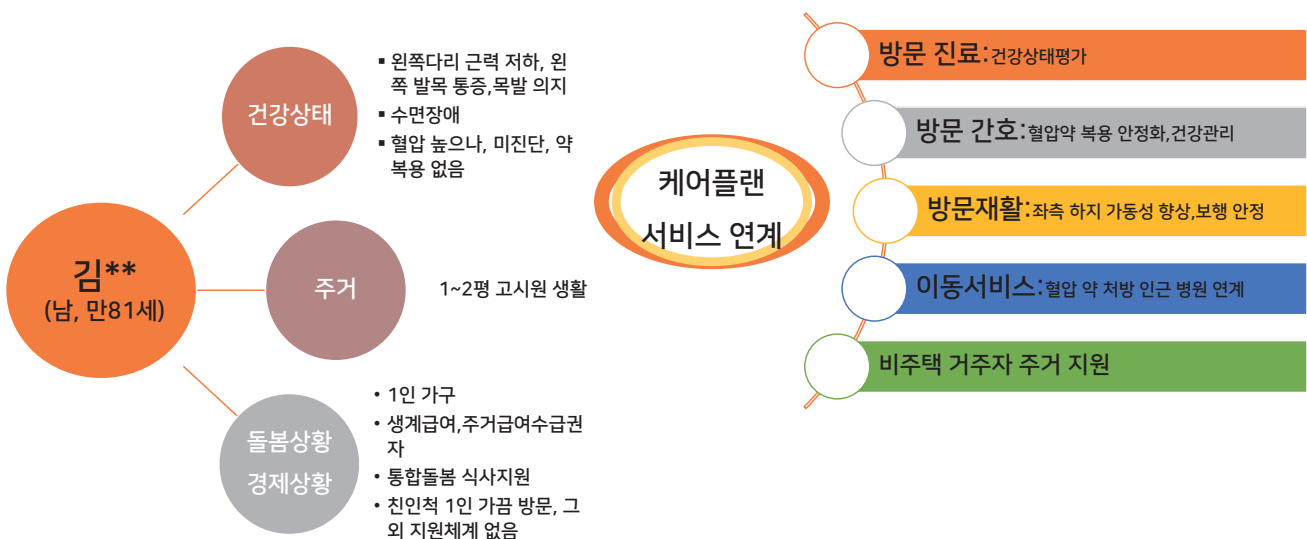
5 사례2 : 청각장애,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 환자 개입

청각장애, 구화로 의사소통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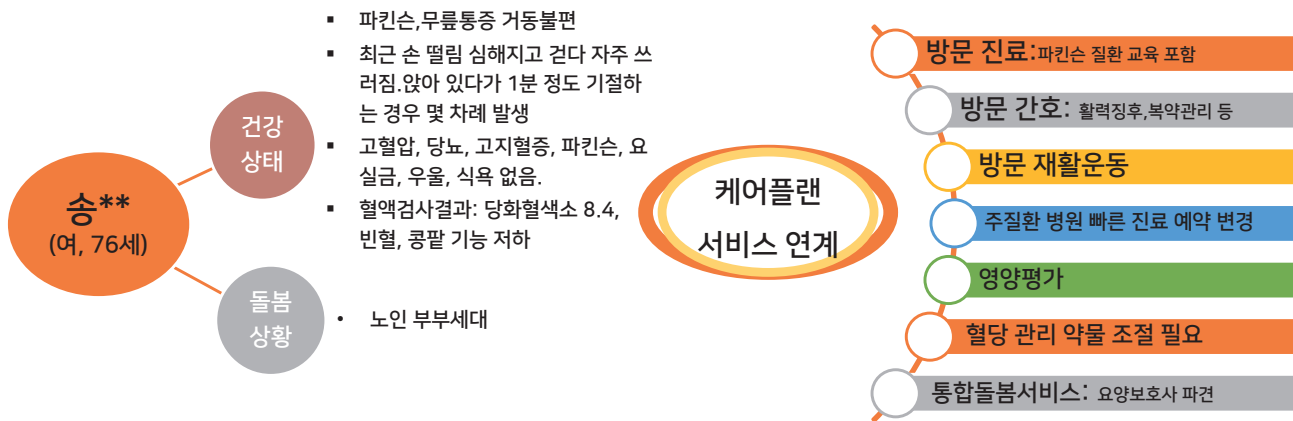
두통이 있었으나 진통제 복용하며 생활함. 종교적 신념으로 국가검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없었다고 함. 가족 지원체계 매우 약함. 그 외 지원체계 없음.

- 재택의료팀과의 신뢰관계 형성 중요 : 인사, 소개, 방문 목적, 개입 계획 설명하고 동의
- 필담으로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요하게 작용
- 혈액검사 진행: 고혈압 진단, 약 복용 동의, 혈압관리 안정화를 위해 인근병원 동행이동서비스 자원 연계하고 재택의료팀 사회복지사 진료 동행
- 재택의료팀 방문간호로 혈압약 안정화 모니터링 진행,
처방된 약 용량과 하루 2번 복용 등 복약 문제와 저혈압 위험 발생,
간호사와 노맞돌 생활지원사 협력하여 투약관리, 혈압 모니터링 진행
- 이후 일상생활 관리 문제가 심각해짐. 인지장애 의심, 진료 및 검사 진행, 내부 사례회의 및 외부 전문가 사례회의 진행, 장기요양등급 신청
-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돌봄 체계 마련, 일상생활 및 복약관리 가능해짐, 재택의료팀 주기적 건강관리 개입

5 사례3 : 주거환경으로 건강 악화 고위험군 환자 개입



5 사례4 : 방문재활운동 결합의 변화



“감사합니다”



건강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제4

주거문제 해결 관련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성과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주거문제 해결 관련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성과

Housing Right



2022.07.01.

이한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한 사회



전월세 가격 상승
세입자 주거비 부담



잡은 이사
짧은 계약기간



불안한 노동
저임금/실업 증가



지역 내 세입자
권리 기반 부실

자가 소유 시장 진입 지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입자-자가소유자 비율은
20년 간 유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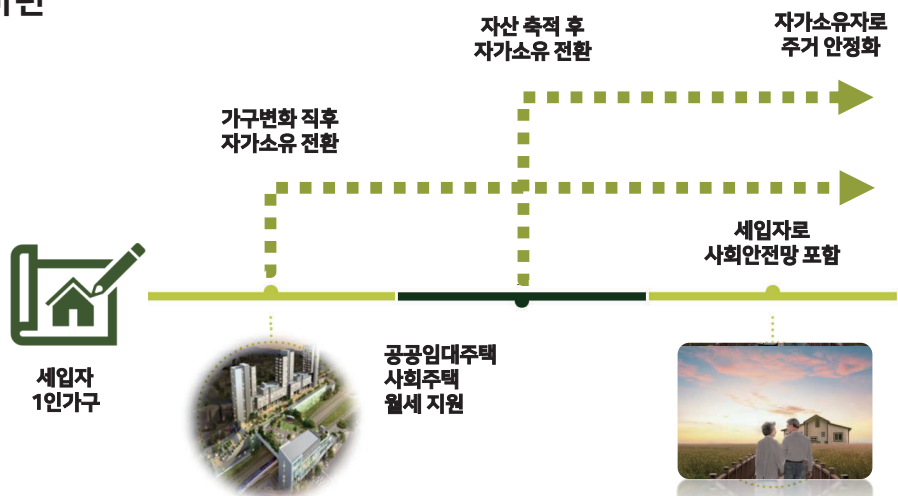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실패한 틀거리**

**특정 시민만을 위한 정책?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

주거 정책의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VS 내 집 마련

납작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



세입자 안정화 X 자가소유 지원
같은 방향의 정책 (청약 올인 NONO!)

자산 축적 = 주거 안정화 = 주거 이동 선택

기존 패러다임

공기업=공익 vs 민간=투기

주어진 자원 내에서, 민간의 투기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이 세금을 얼마나 투여할 것인지
대장동 X LH 투기 사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

민간/공공이 함께하는 공익 거버넌스

급격한 사회적 변화, 고령화 등을 시대적 전환에 대응하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독점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불가능
최대한 많은 자원과 역량을 공익/비영리에서 끌어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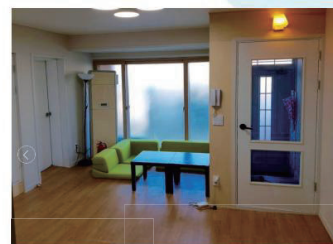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의 확장 = 대전환의 시대에 트렌드이자 의무

사회주택 Social Housing

공공 혹은 개인에게만 맡겨지던 주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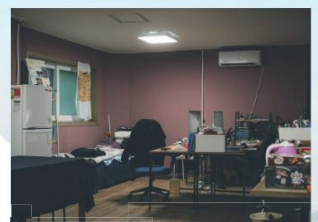
사회주택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시작된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에서의 정주성을 확보하고
저층주거지의 생활형 SOC 및 거점공간을 공급하여
투기 자본 중심의 부동산 생태계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함



주거

Comfortable House
부담가능한 안정적인 집



일자리

Coworking Space
창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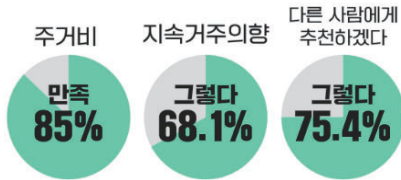
Community
지역 정착, 사경 주체 연계



커먼드

Commund Complex
생활형 SOC / 도시재생거점공간

평균 **76%** 만족



서울시 사회주택 만족도 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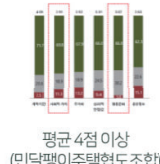
저층주거지를 외면하는 자본, 노후화된 세입자의 주거환경

- > 비영리 자본의 투입 | 공급효과
- 쓰레기가 쌓여도 방치되는 공공임대주택
- > 유연성, 전문성, 집중적 주택 관리 | 운영효과
- 물리적 공간 이외의 콘텐츠가 불가한 주택 정책
- > 커뮤니티/창업/도시재생 활성화 | 콘텐츠 효과

1% 이하
(1/10)



매입임대주택 대비 공실률



사회주택 커뮤니티 효과



1호당 218,000원
절감 효과 (은난순, 2020)

*2,000억 예산 대비

1,000호

지방공기업 사회주택

세금 투입 대비 승수효과

2022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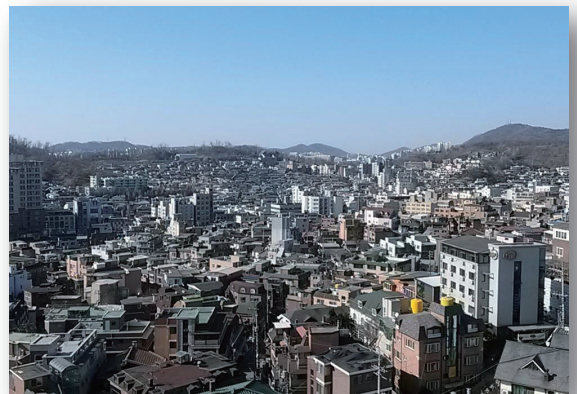
총규모 약 5,600 세대

서울시 약 3,000 세대



아이의 친구 이름 3명 기억하기,
아이와 함께 파스타 요리하기,
아이의 성장 다큐멘터리 만들기,
가족과 사랑의 집짓기 참여하기

10억이 넘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집'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에서도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채 노년이 된 사람에게는
목돈을 모으지 못한 청년 1인가구에게는
주변에 뛰어다닐 공원조차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도

쾌적하고 부담가능한 집이 마련되고
이웃과 돌봄과 기반시설이 제공되는 도시

1. 테마형 임대주택 (국토부)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경 주체 참여 활성화
- 22년 -> 신축/용도변경형 리모델링 결합 모델로 확대 전망
- 공모 기간 단축 + LH -> 지자체/대학/중앙부처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필요

2. 지역 맞춤형 사회주택 (지자체)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지속성 확보 필요
-> 정무적 리스크 및 보증보험 상품의 부재 등
- 토지-건물 분리의 어려움 때문에, 예외 조항 법안 개정 추진
- 지분적립형, 리츠소유형 등 사업 개선모델 개발 필요

3. 사회적 경제와 택지개발

- 3기 신도시 공급 예정 -> 대규모 택지개발 진행 중
- 위스테이 사례처럼 택지개발을 통한 사회적 경제 단지 구축 제안
- 공모사업 시, 사회적 가치 점수 배당을 통해 구현 가능



4. 사회적 금융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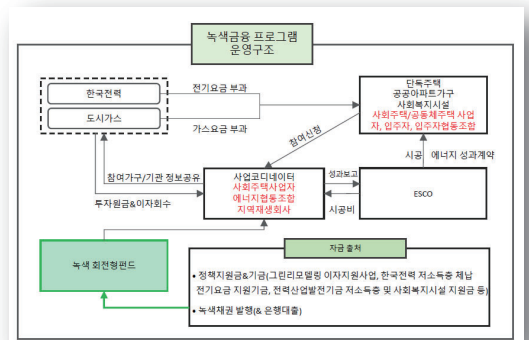
- 부동산 개발에서의 핵심 = 금융 상품
- 낮은 수익률 및 소자본에서 부담 가능한 사회적 금융 지원 필요
- 비영리 민간 기금, HUG 등 공공기금, 사회 투자 사업과 연계 필요

5.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

- 브랜드 아파트에 버금가는 실효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필요
- 시민의 이해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단일 기업으로는 불가
- 임대주택 운영/관리 솔루션 연계를 통한 전문성 강화

6. 법제화 추진

- 사회주택 특별법 제정 or 민간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공기업의 공공주택 <-> 민간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구조 개혁
- 공공성이 확보되면서도 민간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분야 창설 필요



자료출처: 최경호(2022)

토론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좌 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토론1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2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3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장

토론4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토론1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MEMO

MEMO

토론2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문 : 넓히기, 만들기, 협동하고 연대하기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1. 발표문에 대하여

-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 집합적 실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생산-소비-서비스-재분배의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민주주의 경험과 협동적 지역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것임에 누구나 동의할 것임
- 의료사협과 사회주택협회의 경험은 정부 정책, 제도와 결합하여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범위를 확장하고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데 주목하게 됨

2.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시야 넓히기

- 사회서비스의 개념
 - 어떤 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 혹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집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말함. 구체적으로는 예전에는 교육, 돌봄 등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던,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가족 외부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임. 어떤 활동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제공하는가는 사회적 필요와 정책 입안자에 따라 달라짐
-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의 흐름
 - 2003년 : 사회적일자리 시범사업. '사회적 일자리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때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와 연계시키게 됨.
 - 2006년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도입 등 민간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이를 근간으로 바우처제도(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가 도입되면서 사회서비스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평가받음
 - 2010년 :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 발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보육시설내 특기활동 허용, 외국 의료·교육기관 진출 허용 등.
 - 2011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규정. 등록제를 통해 시장 전면 개방. 노인요양제도와 더불어 전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발생.
 - 2012년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3조 제4호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시설

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명시함으로써 드디어 사회서비스가 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됨.

- 2013년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SSISC: 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를 도입하여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구성
- 2015년부터「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반영, 사회서비스 산업의 기초 통계 마련하겠다고 발표. 격년마다 보고서 발표
- 2021년 통계작성 변경을 하여 표본 수를 늘리고 작성 및 공표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임(수요와 공급 격년 조사)

【사회서비스산업의 대분류 및 포괄범위】

대분류	포괄 범위(정의)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재활·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설·협회 등의 산업 활동
돌봄서비스업	의료 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요양 보호 및 단순 돌봄 대상자에 대한 가정·비거주·거주시설 보호 산업 활동
상담·재활서비스업	상담서비스와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건강지원 서비스업	재활서비스 외의 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공교육을 통한 유아·청소년기의 신체·사회적 발달 지원 및 평생교육·직장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산업 활동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사회서비스업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국공립예술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관련 단체·시설 및 문화·예술·체육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활동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피고용자를 파견하거나 중개·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또는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 관련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된 산업 활동

3.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주어진 의제인가, 만들어가는 의제인가

- 현재 지자체에 몇 개의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는가
- 돌봄만으로 국한해 볼 때에도 노인요양,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에 몇 개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가
- 주어진 제도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 보호종료아동, 정신장애인과 같은 지금 부각되는 이슈에 참여/선도할 수 있는가
- 지역사회의 필요를 바탕으로 제도·정부사업을 얼마나 활용하여 확장하고 있는가
- 우리는 지역 거버넌스에 얼마나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회)

[참고 -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

- ▶ (공공임대 질적개선) (S/W 제공) 공공임대 단지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돌봄, 육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주거·사회서비스 제공
- (고령자·장애인 지원) 노화·장애 등을 고려하여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및 개량 지원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 고령자주택 확대 : 고령자 복지주택(임대주택+복지시설) 1만호 등 공급, 지자체 재량 확대·민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특화주택 도입
-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27)」 수립
- 혁신적인 영세·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브랜드화 지원을 통해 사업 효율화 및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조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내실화 도모(“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활용)
- ▶ 청년, 맞벌이·1인 가구 등의 보편적 서비스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 추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테스트베드(test-bed) 기능강화를 통해 신규 서비스모델의 지역사회 기반 실증 지원
-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시범사업(’22.하반기), 다가치 보육 시범운영, 사회적경제조직 노인일자리 수행 지원, 신규 사회서비스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매년)
-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확산 등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제공시간 확대 및 소득기준 삭제
- ▶ 지자체 돌봄 서비스 활성화 위한 포괄예산 지원사업 도입 방안 마련

4.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전략, 협동, 연대

- 사회서비스 확장 전략 수립 : 우리에게서 이렇게나 많은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동의 강화 : ‘사회서비스’를 공통분모로 협동을 강화
- 외부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연대 구축 : 사회서비스 공급/수요 조직으로서 ‘사회 변혁’을 위한 협력이 필수

☞ 10년 동안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은 얼마나 커졌는가? 우리의 내부 협력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우리의 외연은 얼마나 확장되었는가?

토론3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장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제언

홍진주(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는 사회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대안적인 공급 주체로 정책을 통해 호명됨.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서비스 공급과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더 나아가 좋은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앞서 고민하며 돌봄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향한 크고 작은 도전을 이어가며, 스스로 대안적 주체임을 자임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시장의 경쟁시스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향한 노력과 개별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통해 부단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의 참여 확대에 대한 금일의 논의가 다양한 현장 주체들의 시행착오를 딛고, 지속가능한 현실적 대안모색과 정책생산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걸음이 되기를 기대함.

○ 또 하나의 공급자인가? 대안적 주체인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

- 왜 굳이 사회적경제인가? 또 하나의 공급자, 또 다른 이해관계자로서의 위치에 멈춰서지 않도록 하는 장치 필요. 각각이 개별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입장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을 위한 주요한 지역자원인 동시에, ‘좋은 돌봄’을 위한 촉진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 역할 설정이 필요함. 나아가, (개별주체의 비전과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노동, 좋은 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지원정책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과정에서는 좋은 서비스, 돌봄서비스 노동, 지역통합의 측면에서 특화된 지원설계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적 투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발굴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투자가 필요함. 민간을 통한 사회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는 비용절감 정책이 아닌, 서비스 다양화, 전문화를 위한 것이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육성 및 사업화 지원시스템, 공급력/실행력 강화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한 산업적 투자 필요.

- 칸막이를 넘어서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의 필요.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일로서의 접근이 아닌, 새로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 반대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서비스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다수 진입분야로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전략 모색이 필요.

○ 지역사회 내 수요맞춤형 공동생산

- 서비스의 다양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회서비스의 확장은 반드시 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공급자만이 아니라 수요자(특히 돌봄서비스 직접 수혜 당사자)의 욕구, 상황에 맞는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고려 필요함.
- 실제 지역사회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의 경직성, 파편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서비스 접근권, 이용권이 제한당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특히 중증, 복합적 문제를 보유한 취약 계층일수록 서비스 제한성은 더 영향이 큼.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서비스 과정의 유기적 결합 등의 노력이 필요함. 단, 이 과정에서 수요자중심의 사례관리적 접근과 그 과정에서의 통합적 서비스 공급, 개발이 필요함.
- 기업간 경쟁적 관계 설정에서 탈피하여 각자의 서비스를 종합하고 연계하고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연합사업체로서의 컨소시엄 구조 확보, 나아가 지역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장적 공동생산 논의가 필요함.

(예: 마포사회적경제돌봄공동생산사업단/홈케어사업단 -통합창구+(준)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 운영)

○ 좋은 돌봄, 좋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사업개발과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기회

- 좋은 돌봄,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위한 논의는 존재하지만, 실제 실행하기 위한 사업화에 대한 지원체계와 인큐베이팅 기회를 부족함. 돌봄분야 지원은 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직접 공급비용으로만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임. 결국 수많은 신규사회서비스가 단기 시범사업 동안만 (서비스 제공만 하다가) 운영되거나, 명맥만 유지하다가 소멸되는 사례 다수임.
- 단기일자리 창출 내지 서비스 수익금을 넘어선 서비스모델의 개발, 실증적 개발 과정, 출구전략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결합이 절실함. 하지만, 기존의 지원정책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소액의 단기 사업비 지원 등에 그치고 있음. 실제 수요공급에 대한 욕구조사, 인재 양성 및 훈련시스템, 서비스 개발, 비용 시스템 분석, 매뉴얼화, 실증적 사업수행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임.
- 참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관련 사업 사례/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사업(지역조사+네트워크 구축+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컨설팅+시범사업 운영+ 가격정책 수립+ 조직화 등)

○ 서비스 대상, 범위와 영역의 확장과 유기적 연계

- 전통적인 (어르신)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흐름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는 현상.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보건, 의료분야의 연계 강화, 케어안심주택 논의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범위, 주체의 확장이 필수적임. 실제 지역사회 안

에서의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다각화와 틈새 서비스 개발, 나아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조직화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특히 주택, 식사 등 뿐 아니라 정서,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데, 이때 사회적경제 영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제와 사업들의 결합이 결국 대안적 서비스모델 구축에 기반이 될 수 있음.

○ 지역 차원의 통합돌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돌봄 생태계구축

- 좋은 노동과 좋은 돌봄을 지향하는 돌봄서비스, 주거, 의료가 연계된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역 내에서 해당 조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나아가 관련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일 수 있는 주민 조직화, 관련 정책 및 유관 서비스 간의 연계. 협력 고리 강화 등의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네트워크기반 생태계구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개발, 육성, 공급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육성사업 추진시,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기반 실현가능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전 구조 확보의 필요(예; 네트워크사업단, 자치구 내 거버넌스 구조강화, 중간지원조직, 사회서비스원 등의 역할설정 등)

토론4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MEMO

MEMO

전체토론

MEMO

MEMO

